

(3) 國際債權團의 韓國 短期債券 處理

- (배경) 정부는 단기 외채의 중·장기채 전환을 통해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국제채권단과 협상을 진행중임
- (내용) 국제채권단은 당초 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요구했으나 최근 국채 발행과 상환기간 재조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른바 '신계획(New Plan)'을 제시하였음
- (평가) 국제채권단이 제시하는 국채 발행 조건이 관철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를 적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

단기외채의 중장기
채 전환을 통해 외
환위기의 근본 해
결 도모

- (배경) 정부는 단기 외채의 중장기채 전환을 통해 외환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국제채권단과 협상을 진행중임
 - 지난해말 촉발된 외환위기는 국제기구의 지원금과 국제채권단의 대출 만기 연장으로 다소 진정되었으나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된 상태는 아님
 - 금년 1/4분기 만기 도래 예정인 외채 280억 달러 가운데 1월분은 130억 달러에 달함
 - 1월달은 외환 보유고 80억 달러와 IMF 지원금 20억 달러 G7 지원금 20억 달러 등에 힘입어 외환 수급 사정에는 어려움이 없겠지만,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
 - 정부는 만기 도래한 채권의 상환 기간 연장,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신규 차입(100억 달러), 단기외채의 중·장기채의 전환(150억 달러) 등을 통해 외환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
 -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월21일 '뉴욕 채권단 회의'에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을 마무리짓고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구제금융 패키지를 모두 확정지를 계획임

국채발행과 상환기
간 재조정을 동시
포괄하는 '신계획
(New Plan)' 제시

- (내용) 국제채권단은 당초 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요구했으나 최근 국채 발행과 상환기간 재조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른바 '신계획(New Plan)'을 제시하였음
 - 국제채권단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JP 모건은 기존 채

무를 모두 한국 정부의 국채로 전환하자는 안(소위 'Morgan Plan')을 견지해왔음

- JP 모건은 당초 단기채무의 중장기채 전환(150억 달러)과 외환보유고 충당(100억 달러)을 위한 모든 외화차입을 250억 달러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해 일괄 해결하자고 제안하였음
-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채 발행 보다는 만기연장되는 단기외채에 대한 전액 지급 보증을 추진할 방침임
- 앞으로 국제채권단과 협상결과에 따라 국채 발행 여부와 규모가 정해지겠지만, 채권단과의 대출선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지급 보증 방침을 관철 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임
- 최근 미국 채권단은 장기 국채 발행과 상환기간 재조정을 동시에 포괄하는 이른바 '신계획(New Plan)'을 제시하였음
- 단기채무의 중장기채 전환(150억 달러)에 있어서 국채발행액을 90억 달러 이하로 낮추고, 나머지 60억 달러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지급보증을 전제로 해당 은행간 협상에 의해 장기채무로 전환
- 발행 조건은 채권 만기를 1년·3년·5년·10년으로 다양화하고, 채권 표시도 달러화 이외에 엔화 및 마르크화도 포함시키는 한편 채권 발행자가 만기 이전에 발행액을 중도 상환할 수 있는 '콜 옵션(Call Option)' 허용,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달라지는 변동 금리부 채권 발행 등을 제시

경제적 부담,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채발행 규모 적정화 필요

- (평가) 국채발행 규모가 클수록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함께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채발행 규모를 적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
- 국채발행 규모가 클수록 한국은 장기에 걸친 고율의 이자 지급, 높은 수수료 부담, 한국물 채권가격 하락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됨
- 현재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크게 떨어져 있어 최소 12-13%의 고금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, 국채 발행시 10년 만기채가 선호될 전망이어서 국채 발행 당시의 고금리를 장기간 지급해야 함

- 콜 옵션이 적용될 경우 만기전 중도 상환이 가능해 우리에게 유리하나 적용 금리가 현재 국제채권단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음
- 100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발행될 경우 발행 첫 해에만 이자로 약 13억 달러, 수수료로 1억~1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해야 함
- 지난해 해외 발행 한국물 채권규모가 100억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물 시장이 작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, 대규모 국채 발행시 앞으로 수년동안 물량과 다르다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 채권물 전체의 유통시세가 하락할 수 있음
- 또한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는 국민의 외채 부담 증가,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음
 - 국채발행을 통한 민간의 외채 상환은 민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대외 채무를 납세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국민의 외채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낳게 됨
 - 정부가 민간 채무를 대신 상환해 줄 경우 관련 경제 주체의 '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'가 발생할 수 있음
-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우선 외채의 만기 연장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 차입을 최대한 지원하는 전략으로 유동성 확보를 추구해야 할 것임
-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경우 그 규모를 적정화하고 발행 조건에 있어서 국제채권단내의 경쟁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임
- 민간 외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 보증도 재정건전화와 국가 신용도의 유지를 위해 선별적으로 신중히 행해야 할 것임

(김 연 호)